

野 “尹정권 무능에 폭망” vs 與 “이재명·조국, 뻔뻔한 범죄자”

(이재명)

(한동훈)

>> 1면 '거야 심판...'서 계속

한 “불합리한 규제 모두 해소 범죄자들 지배하면 미래없다” 이 “물가폭등·민생 등 파탄났다 한국 퇴행시킨 장본인尹정권”



제22대 총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선거 유세현장인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앞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뉴스시스

가락시장 민생 현장 방문을 마친 한 위원장은 망원역으로 이동해 조정훈 서울 마포구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운경 마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어제 여의도의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 시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여러분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훈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경제전문가이고 실천가”라며 “조정훈이 마포에 집중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마포에 집중할 것이란 걸 말하는 거다. 마포를 조정훈과 함께 바꾸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또 “함운경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을 가진 분이다. 선동가가 아니라 진짜 생활인이다”면서 “함운경은 재건축과 재개발

에 대해 명분을 가지고 실속 있게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신촌 유플렉스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펼친 한 위원장은 범죄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융성하느냐 쇠퇴하느냐, 정의로워지느냐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라며 “경제·민생·정치 개혁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심판'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등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역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중·성동, 동작, 인천 시당 총선 출정식(부평) 등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지자들이 파란 풍선과 '1'과 '3'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을 연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출정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라며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이자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공공요금도 올랐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 국가의 위상도 추락했다. 전쟁 불사만 외치는 정권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며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퇴행시킨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여왔다.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심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대한민국 정상

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의지를 확실히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민생을 되살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돌리겠다”고 외쳤다.

이 대표는 출정식 후 중구·성동구로 이동해 전현희 후보와 박성준 후보의 유세 지원에 나섰다, 이후 동작으로 이동해 류상영 후보와 김병기 후보의 유세에도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이다”라며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마련한 예산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닌,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장이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아닌,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김현정·안승진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가짜뉴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한 총리,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 검찰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 구축 사전투표부터 '투개표지원상황실'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선거 지원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 대상 테러행위 등 신종 선거범죄 반발 상황을 고려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이를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허위 선동, 선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투개표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크게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과 선거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 우편물이 투표소에서 지역 선관위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에 경찰이 호송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첫 단계에서만 경찰이 호송했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178개와 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인력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공직 기강 확립 조치도 논의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중심으로 공무원 정치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행안부는 시도 합동감찰반을 통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집중 감찰에 나선다.

정부는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선거 지원을 모니터링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부터는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는 4월 5~6일 이틀간 가능하다. 총선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45명을 선출한다. /뉴스시스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만3630곳 첩부

“벽보 훼손·철거는 중대범죄”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

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이 밖에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허위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정보가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시스